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2016. 12.

< 연구진 >

연구책임

• 정경석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면적의 2%인 도시공간에 지구 인구의 약 54%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2030년에는 60%, 205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대의 도시는 GDP의 약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등 자원 및 인간활동의 70%가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도래됨
- 대전시는 민선 6기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향후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행정 및 민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유도해 내는 등 사회혁신 활동을 통한 도시공동체 회복에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주요 연구 결과

1)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 1기 공유서울 추진계획에서는 공유도시의 비전 및 추진방향, 공유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총 20개의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난 2015년 4월에 수립된 2기 추진계획에서는 1기 추진계획에서의 추진성과 및

한계 등 평가하고,

2) 공유활성화 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공동체사업 내지 사회문제 해결형의 혁신사업으로 지원할 것인지, 대안적 경제모델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 공유활성화 사업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원칙 및 특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공유자원에 대한 적정 규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능 유무,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공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단

- 교통, 문화,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 활동과 충돌되는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내지 별도의 「공유네트워크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4) 민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 규정

- 대전시는 공유활성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대민 홍보 등을 통해 사회공론화 할 것과 행·재정적 지원자로서의 비전 제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지역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에 의한 상향식 방식의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규제완화책 등을 선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이 공유플랫폼 구축과 사업화 전략에 적시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해줄 필요가 있음
- 민간영역에서는 보다 잘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최소의 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5) 「더불어 모두다 공유!」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공유단체, 공유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공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공유사업의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과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 등을 개최토록 함
- 한편, 예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홍보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는 장을 마련함
 - WTA의 하이테크페어, 대전 아티언스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와의 연계 및 공조를 통해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리라 봄
- 공유네트워크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체험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

6) 「찾아가는 배달 공유마당」 운영

-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공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 시민체험 및 참여 확대를 일상적 공간 내에서의 공유문화 생활화 유도

7) 공유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조성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자본 운용 한계 등으로 초기 정착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으로 소셜펀딩(Social Funding), 소셜벤처링(Social Venturing), 커뮤니티 펀딩(Community Funding)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주로 기부, 후원,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크라우드 소싱에 기반을 둠)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특징임
- 최근에는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매체를 통해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보다 쉬운 참여를 유도해 내면서도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공개적인 펀딩이므로 펀딩 과정이 공개되고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과정을 가짐으로써 신뢰관계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클라우드 펀딩의 대상은 부동산 개발사업, 벤처기업 및 아이디어 지원 등 경제적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공공가치를 위한 참여(기부, 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제 목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조사방법 및 주요 내용	4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4
제2장 문헌검토 및 추진동향	9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9
1.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9
2. 공유경제 정의 및 특성	10
3. 전통경제와의 차이점	12
4.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14
5. 공유경제의 도시정책적 의미	14
제2절 공유경제 추진 동향 및 추진사례	16
1. 국외 공유경제 시장 규모 및 전망	16
2. 공유관련 정부정책 추진 동향	17
3. 각 지자체별 공유지원 제도 및 사업 추진 사례	20
4. 주요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29
제3장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36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36
1. 추진배경	36
2. 추진목적	36
제2절 법적 근거 및 기본 정책 방향	37
1. 지원조례의 법적 지위 및 위상	37
2. 유사법령과의 관계	38
3. 기본적 정책방향	39
제3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40
1. 2015년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	40

2. 2016년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	43
제4절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5
제4장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52
제1절 공유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환경 조성	52
1. 법.제도적 개선 및 정비방안	52
2. 민관협력 및 조직 역량 강화 방안	53
3.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53
제2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53
1. 「더불어 모두가 공유!」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53
2. 「찾아가는 배달 공유마당」 운영	54
3. 공유공간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공유시책 개발	54
4.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 조성	55

참 고 문 헌

표 차 례

<표 1> 공유서비스와 렌탈서비스의 차이점	13
<표 2> 해외 공유 관련 사업 추진 사례	16
<표 3> 기존 유사 민박업과의 비교	18
<표 4> 지방자치단체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20
<표 5> 부산시의 공유사업 추진 현황	22
<표 6> 광주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요건	23
<표 7>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요건	24
<표 8> 경기도 공유경제 사업 내용	26
<표 9> 전국 시·군·구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현황	27
<표 10>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주무부서	30
<표 11> 2015년도 공유네트워크 사업 예산	41
<표 12> 2015년 공유네트워크 선정공동체 및 사업예산	41
<표 13>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자원 등을 활용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예시	45

그림 목 차

[그림 1] 공유경제의 특성	11
[그림 2] 공유경제 주요 패러다임	11
[그림 3]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14
[그림 4]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	19
[그림 5] 공유서울 자체 사업 추진 현황	21
[그림 6] 공유경제에 의한 경제시스템 재편	29
[그림 7] 대전형 커뮤니티 맵핑 사례(대전 시민 공유공간 지도)	39
[그림 8] 건너유 리빙랩 지식 공유 협업 사례	39
[그림 9] 공유네트워크 플랫폼 ‘대전쉐어’	40
[그림 10] 공유공간 ‘별집(Birlzip)’	42
[그림 11] 자동차 공유 ‘피플카’	42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방법 및 주요 내용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면적의 2%인 도시공간에 지구 인구의 약 54%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2030년에는 60%, 205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대의 도시는 GDP의 약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등 자원 및 인간활동의 70%가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도래됨
- 대전시는 민선 6기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향후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행정 및 민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유도해 내는 등 사회혁신 활동을 통한 도시공동체 회복에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제2절 조사방법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공유도시 추진 사례 지역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사례조사 실시함
- 공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함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FGI자료를 참고하되, 공유네트워크 시범공모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 등을 진단
- 대전시 공유시책 사업에 대한 중간 이행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정책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
-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활성화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추진체계, 실천과제 등을 제시함
- 대전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공유 시책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적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전시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공유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방안 및 공유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함
-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과 대전시 공유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방향성 정립 및 주요 추진 전략 등을 제시토록 함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대전시는 공유네트워크 TF팀을 지난 2014년도에 구성하여 공유네트워크 추진전략과 시책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성과의 일환으로 공유네트워크 워킹그룹 보고서를 발간하였음(정경석 외 7인)
- 김형균오재환(2013)은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에서 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과 부산의 도시재생시설활용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플랫폼화하여 공유경제 경험과 교육기회 확대, 개인 간 거래에서 마을 간 거래로의 확산, 신뢰구조 조성, 그리고 행정지원 등의 부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최길수(2015)는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통한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등을 규정하고, 공유경제의 사례분석과 FGI 분석을 통해 대전형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내지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논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 관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역문제에 대한 자생적 대응수단으로써 공유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연합으로써의 신뢰 관계망 형성이라는 공유네트워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 및 시책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제2장

문헌검토 및 추진 동향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제2절 공유경제 추진 동향 및 추진사례

제2장 문헌검토 및 추진동향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1.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 공유경제는 성장,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인한 가계부채의 증대,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초래하게 되면서 형성된 시대적 흐름의 반성 속에서 태동함
- 다시 말해, 공유경제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그 태동배경을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익명성이 날로 커지게 되면서 전통적 사회에서는 일상화 되어있던 이웃간의 친분 내지 교류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
- 이에 지역사회 문제(Community Issues)에 대한 관심 고조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 및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됨
-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테일러리즘(Taylorism) 또는 포드니즘(Fordism)으로 대변되는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욕구가 최근 소유 대신 다양한 기능 및 경험 등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는 범지구적 장기 경기 불황과 환경문제 등을 직면하게 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자원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대안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과도한 물품생산 및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활용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공유경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 한편, 최근 세계 10대 사회혁신¹⁾ 중 4가지가 인터넷 기반의 사회혁신일 만큼, 공유경제는 오늘날 온라인 사회혁신의 흐름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

1) ①공정무역 ②그라민 은행 ③앰네스티 인터내셔널 ④옥스팜 ⑤리눅스 등 오픈소스 ⑥Open University ⑦시민 저널리즘 ⑧위키피디아 ⑨여성운동 ⑩NHS Direction 등임

중심에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²⁾이 자리 잡고 있음

- 즉, 자원공유의 흐름이 통신수단의 발달과 디지털 공동체 형성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오늘날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 요약해 보면, 공유경제의 태동 배경에는 시장의 필요성과 공동체적 필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써, 글로벌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경제적 위기,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공동체의 부활, 환경 위기 등의 문제가, 그리고 국내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소비패턴의 변화, 청년창업의 활성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이업종간 융합 및 다변화 등이 공유경제를 촉발 시킬 수 있는 기반환경을 제공해 줌
-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기반의 시민 참여 및 협력적 소비가 가능한 공유경제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도 공유경제 태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 공유경제 정의 및 특성

- 공유경제란 용어는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된 용어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함³⁾
- 일반적 물품이나 생산설비, 또는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음⁴⁾
- 시민사회 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통해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려는 소위 사회혁신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등장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기도 함(정경석, 2015)
-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로렌스 레식 교수도 공유경제는 가격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social relations)에 의해 조율되는 경제라고 정의하며, 공유경제 개념에서는 사회관계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음

2)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식, 자금, 인적 자원 등의 나눔과 상호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의 발현 형태임

3) 로렌스 레식 교수의 저서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4) 공유경제 개념의 기원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려는 시도로 1991년에 시작되어 포콜라 레(이탈리아어로 “난로” 를 의미)운동으로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지역과 사람간에 굳게 닫힌 관계망을 치유하고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

공유경제 특성	
따뜻한 자본주의	개인은 물론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착한경제 구현
협력적 소비	과잉소비 대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소비
디지털공동체	IT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함께 하지 않는 익명의 구성원들 간에도 같은 취향, 생각의 공유만으로 공동체를 형성
신뢰자본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집단지성	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및 도시문제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의 지혜 장을 구현

[그림 1] 공유경제의 특성

- 공유경제는 따뜻한 자본주의, 협력적 소비, 디지털공동체, 신뢰자본, 집단지성이란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공유경제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 추구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추구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공유 운동 웹진 ‘셰어러블’⁵⁾의 공동창립자 인 Neal Gorenflo도 공유경제의 범위를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로 대변되는 글로벌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된 시각임을 강조한 바 있음
- “도시의 수많은 정책을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 개발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유도시 전략이야말로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임을 강조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유연한 사고를 위한 혁신 수단으로써 공유경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그림 2] 공유경제 주요 패러다임

5) <http://www.shareable.net>

3. 전통경제와의 차이점

- 공유경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의 포콜라레(이탈리아어로 “난로” 를 의미) 운동, 우리의 두레 및 품앗이 등 기존의 전통적 나눔과 구분이 됨
- 첫째, 규모 확보의 용이성을 들 수 있는데, 김형균(2013)은 “공유경제의 핵심인으로서 적정규모, 여분의 자산, 공공재에 대한 믿음,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등” 이 필요함을 역설함
- 이처럼 공유경제는 IT와 SNS 등 모바일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공유경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켰고, 참여자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기존보다 용이해진 특징이 있음
- 두 번째 특성으로 공유 대상의 변화를 뽑을 수 있는데, 전통적인 공유의 방식은 친족, 마을 등 서로 알고 지내는 개인들 간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거나, 종교적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Schor et al.(2014)이 지적하듯이 최근에 등장한 공유 개념은 친족이나 전통 사회내의 공동체보다는 낯선 이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새로운 방식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협력적 소비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한편, 전통경제는 공급자의 이윤창출을 위해 제품에 대한 대량 생산과 경쟁적 소유욕에 따라 과잉적인 소비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제품이 갖는 기능의 공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자원 절약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부수적인 이윤의 창출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경제와는 차이가 있음
- 비록 공유경제란 용어가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처음 제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경제를 단지 경제적 가치 추구 관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 공유경제가 무형자원 거래 등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과 유휴자원을 통한 거래수익 창출, 그리고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영역에서의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개선 등의 사회적 가치 추구 관점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공유는 기존의 렌탈서비스와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바, 공유경제의 핵심적 원칙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유재의 공유화’ 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즉 기본적인 가치추구의 방향은 사회적 신뢰관계에 기반한 자원의 동원 및 배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렌탈서비스는 기업이 재화를 스스로 보유하고 이를 고객에게 직접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자원구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등장한 소유경제 관점의 거래모델이라

고 한다면, 공유경제 서비스는 재화를 보유한 사람과 재화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공유플랫폼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commons⁶⁾ 기반의 거래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표 1> 공유서비스와 렌탈서비스의 차이점

구분	공공서비스	공유서비스	렌탈서비스
도입배경	시장 실패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 필요성	소비트렌드의 변화(소유에서 기능의 소비문화로 전환)
도입 목적	공공성 확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증진	기업의 경제적 가치 증진
가치추구방향	정부지원 기반의 이익 달성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자원의 동원 및 배분 사회적 신뢰 증진	가격기반의 경제적 가치 창출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핵심원칙	공유재의 공유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유재의 공유화	사유재(제품)의 기업 및 개인 입찰화
자본유형	사회간접자본(SOC)	사회적 자본(SC)	경제적 자본(EC)
교환방식	G2C	P2P, B2P(공유, 교환, 거래 또는 대여)	B2B, B2C (주로 대여에 의존)
재화의 소유권	정부(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 공동 소유 개인의 재량권에 의한 commons의 사용권 부여	기업
(플랫폼)운영 주체	정부(공공기관), 민간 위탁	개인 또는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유단체	기업
이용 주체	모든 국민	지역공동체 및 주민	기업 및 개인
이용 방법	무료 내지 서비스 이용료 지불	무료 내지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료 지불	물품·제품에 대한 임대료 및 서비스 이용료 지불
특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분할성	자원절약, 환경보호,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초기에는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게 되면서 영리화로 전환(공유 및 렌탈, 리스전문 기업으로 전환)	영리 목적의 이윤 극대화 배제성, 경합성, 분할성

비배제성 :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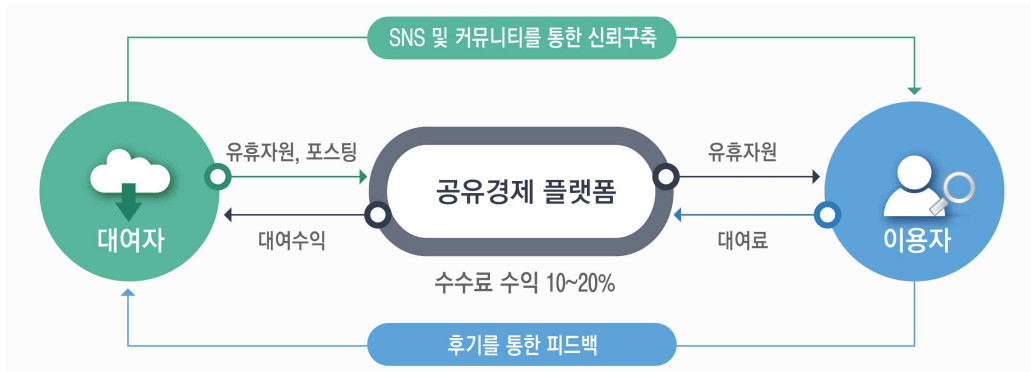
비경합성 : 특정의 재화에 대한 한사람의 소비 증가가 타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음

비분할성(공동소비성) :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음

6) commons란 자원에 대한 접근, 사용,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구조화하는 특정제도적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재산권(property)과 반대되는 개념임. 즉 재산권이란 법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반면, commons의 특징은 어떤 개인도 commons 내에 특정 자원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것임(손상영, 2015,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4.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간(P2P) 공유자원 거래를 중개하며, 거래 성사에 따른 중개 수수료나 플랫폼 이용료 형태의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며, 수수료 수익은 보통 10~20%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됨(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및 시장 참여자,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간의 관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매커니즘

출처 : 클라우드산업연구소

- 공유경제는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와 그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짐
- 이용자는 유휴자원에 대한 대여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 때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유단체 내지 공유기업은 일정 수준 이하의 거래 수수료를 취한 후 나머지 거래 대금을 대여자에게 전달하는 수익모델이 만들어지게 됨
- 이용자는 유휴자원 이용 후 후기를 통해 이용 만족도와 대여자의 신뢰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피드백 해줌으로써 상호간의 신뢰관계망을 형성하게 됨

5. 공유경제의 도시정책적 의미

- 최근 서울시나 부산시 등이 공유경제를 표방하며 공유도시를 선언하기도 하였는데, 공유도시란 이러한 공유경제 내지 사회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를 의미함

- “단순히 소비문화를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 경제구조를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개인간 단절 및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정된 도시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로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복지,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수요는 점차 급증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자원투입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과정을 통해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유희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도시 개념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자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도시 정책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공유경제는 생활 속의 잉여자원을 사업모델화 하여 기업화 하는 전략과 약화된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복원하고 강화시키는 공동체문화에 대한 치유 및 확산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먼저, 사업모델화를 통한 기업화 전략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제 활성화란 전방향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IT기반의 벤처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동체 문화에 대한 치유 및 확산 전략은 커뮤니티(마을) 단위의 생활문화 공동체(골목문화) 관점에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특히,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는 물건과 자원의 공유경제 씨앗이 손쉽게 싹트고 자랄 수 있는 생명의 터 역할을 하는 최소의 공간단위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최소 공간단위의 마을에서 구현 가능한 공유경제로는 그 유무형의 자산형태에 따라 공간, 물건(교통수단, 안쓰는 물건 등), 창작물(그림, 조각, 서예, 공예 등의 문화예술 작품), 그리고 경험(지식, 재능 등) 공유 등으로 그 사업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단순한 공유대상에 대한 고찰보다는 공유 기법에 대한 고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공유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자원절약, 환경보호, 공동체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 내는데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도시정책적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제2절 공유경제 추진 동향 및 추진사례

1. 국외 공유경제 시장 규모 및 전망

- 미국 컨설팅업체 프라우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약 150억 달러 규모였으나, 향후 10년 뒤에서는 잠재가치가 약 20배정도 증가한 3,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⁷⁾
-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연평균 80%이상 성장 할 것으로 예측(베스솔루션)되고 있으며, 공유경제로 2016년까지 약 1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imc.com, 2015)
- 이처럼 국외에서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유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외에서는 자기 집의 일부 또는 남는 방을 여행자를 위해 빌려주는 Airbnb와 자동차 공유서비스인 Zipcar, Uber 등의 공유사업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표 2〉 해외 공유 관련 사업 추진 사례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비 고
BIG LUNCH	- 동네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만들어먹거나 각종 유명 공원으로 놀러 나온 시민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파티	영국 (오프라인)
SWAP IN THE CITY	- 패션과 미용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참여로 기부와 기증을 통한 옷과 패션소품들의 물물교환 행사	독일 (오프라인)
AirBnb	- 세계최대 숙박공유 - "Air Bed and Breakfast"를 줄여 만든 이름으로 Air Bed란 평소에는 접어두었다가 필요한 때 바람을 넣어서 쓰는 침대를 의미하며, Bed and Breakfast란 하루 밤 묵을 침대와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는 숙소를 의미 - AirBnb는 자기 집의 일부 또는 방 하나를 여행자를 위해 빌려주는 개인(다시말해 민박)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업임	온라인서비스
Uber	-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토록 한 서비스 -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	미국 (온라인)

7) PwC, Sharing Economy Survey 2015, 2015.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비 고
Zipcar	- 자동차 공유서비스 -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해 볼 수 있고, 집 카드를 차량에 부착된 인식기로 인식시켜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에 가까운 지정 주차장에 반납하는 차동차 공유서비스임	
오토리브 (Autolib)	- 파리의 중심지와 46개 협력 도시에서 공공 전기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 폴리콩세이(Polyconseil)라는 지능화된 운영시스템의 탑재를 통해 차량 간 통신, 대여스테이션, 차량내 컴퓨터, 콜센터 관리, 고객 청구, 차량스테이션 부하조정, 웹 프론트, 지원사무소 및 서비스와 연관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	프랑스 (온오프라인)
블라블라카	- 카풀 서비스 - 한달 이용자가 약 40만명으로 프랑스 고속철 TGV 한달 이용자의 1,000배에 달함	프랑스 (온오프라인)
카풀링닷컴	- 카풀 서비스 - 약 400만명의 등록회원수에 이용자는 약 100만명인 것으로 보고	독일 (온오프라인)
스마트워크센터 (SWC)	- 민관합작 더블유(Double U)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공유 사무공간 -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육아 시설 등의 부대편익 시설 및 서비스 등이 갖추어져 있음 -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100여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예약하고 자신과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를 스마트폰의 지도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네덜란드 (온오프라인)
스키마토크	- 원어민 일대일 영어회화 서비스	온라인서비스
Crubwithus	- 함께 식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온라인 소셜 다이닝 서비스	
비키	- 영화, 드라마 등의 자막을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동영상 번역 커뮤니티 서비스	”
오데스크	- 온라인 인력 중개 서비스, 기업과 프리랜서간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인력풀 제공 서비스	”
TaskRabbit	- 남은 시간과 인력을 거래하는 온라인 노동 거래 서비스사업	
쿼키	- 아이디어 클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활용한 제품 개발. 최초 아이디어에 회원간 의견을 더하여 최종 확정 대량생산	”
Dogvacay	- 장기 출장,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봐줄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사업	
호스텔빌리지	- 빈 쪽방을 여행자들이 저렴한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빈방 공유서비스	일본 (온오프라인)

출처 : 정경석(2015), 공유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대전발전포럼.

2. 공유관련 정부정책 추진 동향

-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7일에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4개 영역 중 공유경제 서비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선별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

침을 발표함⁸⁾

- 공유경제 중 숙박공유, 차량공유, 금융공유 서비스를 선정하여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함
- 정부는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가칭 ‘공유민박업’ 을 신설하여 연간 120일 이내에서 본인의 거주 주택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임

〈표 3〉 기존 유사 민박업과의 비교

구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공유민박업
허용지역	도시지역	(준)농어촌지역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 다만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허용 가능)
이용자	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연간 영업 가능 일수	365일(상시)	365일(상시)	120일
대상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규모 제한	230㎡ 미만	230㎡ 미만	230㎡ 미만

- 우버의 영업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카셰어링(차량 공유) 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개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임
- 이외 차량 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금융공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⁹⁾을 도입하여 시행 할 예정임
-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내외 문헌 및 국내 과학기술혁신 전문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표한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에서도 공유경제를 10대 트렌드의 한 분야로 선정하기도 함
- 한편,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부 3.0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추진 중에 있음

8) 원자료 : <http://www.mof.go.kr/wires/detailNewsDetailView?searchBrd=MSPBS00000002&searchNtd=MSP0000000242&menuN=0000>

9)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함.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후원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생창업기업 등이 온라인펀딩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임.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출처 : <https://www.crowdnet.or.kr>

□ 정부3.0의 비전과 전략



[그림 4]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가치화 하는 사업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타운¹⁰⁾과 창조경제혁신센터¹¹⁾를 운영 중에 있음
 - 창조경제타운은 사업화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아이디어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수행하며, 아이디어 제안자가 사업화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창조경제 지원 사업들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을 연계·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정부-지자체-지원 대기업이 상호 협업하고 공유하는 일대일 전담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들 중간지원조직 역시 아이디어 공유와 집단지성의 발현을 통해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발판이 되고 있음

10) <https://www.creativekorea.or.kr>

11) <https://ccei.creativekorea.or.kr/>

3. 각 지자체별 공유지원 제도 및 사업 추진 사례

- 국내 광역시도 중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등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서울시와 대전시, 광주시 등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공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와 경기도 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시책의 보완적 개념으로 공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4〉 지방자치단체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경제기획과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참여혁신단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정경제과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 서울시 공유서울

-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20일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그 해 말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공유허브」(<http://sharehub.kr>)를 통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과 공유관련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부서 (협조부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나눔카)	- 서울시내 564개소, 1,070대 차량 운영 - 회원수 165,667명, 누적이용자수 282,356명	교통정책과
공유서가	- 공유서가 19곳 운영	사회혁신담당관 (공동주택과)
공구도서관	- 공구도서관 14개소 운영	사회혁신담당관 (공동주택과)
아이웃 나누기	- 구로구,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75개소, 5,000여명 - 자치구 공유축진사업비 지원(서대문, 동작) 12,000천원	출산육아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주차장 공유	- 용산구(거주자우선주차장 359면), 송파구 추진 중 - 자치구 공유축진사업비 지원(광진, 송파, 강동, 성북구)	주차계획과 사회혁신담당관
공공시설 유희공간 공유	- 유희공간 전면 개방 : 970개 - 이용실적 : 22,931건	행정과
한지붕 세대공감	- 어르신은 주거공간제공, 학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서비스 제공 - 노원, 광진 시행 및 종로, 서대문 확대예정 - 23가구 28명 운영 중	사회혁신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도시민박 활성화	- 도시민박업 443개 업소 1,399실 지정·영업중 - 도시민박 아카데미 개최 : 총 8회 - 제도개선 건의 : 5회	관광정책과
휴먼 라이브러리	-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2회 개최(4월, 11월)	서울도서관
서울 e-품앗이	- 15개 지역품앗이 공동체 운영 중 - 회원수 5,685명, 거래건수 21,052건	서울복지재단
공공 와이파이 서울	- 473지역 1,992AP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열린데이터광장	- 110개 시스템 1,182종 데이터셋 개방 - 서대문구, 구로구 등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 구축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 사진은행	- 총 사진 24만 건 제공(WOW서울 23만 건, 포토앨범 9천건)	뉴미디어담당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 42개 기관 - 사업비 지원 : 27개 사업, 461백만원	사회혁신담당관
서울 공유허브 운영	- 공유허브 홈페이지 오픈 : ' 13.6.26 - 세미나, 시작학교, 체험행사 등 개최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 공유서울 컨퍼런스 개최, 공유서울 전시회 운영(공유단체·기업 23개소, 서울시 공유사업 11개 참가)	
공유도시 홍보	- 공유서울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부착용 홍보물 제작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도어 등 - 언론 홍보 : 지면 100여건, 방송 20여건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	- 용산구(주차장), 광진구(한지붕세대공감) 기추진 - 14년, 13개구 15개 사업, 185백만원 지원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 은평구 주민사업으로 공구대여 및 주민체험교실 운영	
공유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공유활동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해 공유축진위원회 심사 후 인중, 홍보기회 제공	

[그림 5] 공유서울 자체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도시문제해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중 서울시가 지정하는 공유기업은 상업적인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업을 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곽노환, 2013)

- 이 중 2016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지정 공간공유형 기업은 WOOZOO, BnBHERO, LOCAL STITCH, STORE SHARING 등 총 20곳임
- 여타 시도들이 경제관련 부서에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 산하에 사회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을 별도로 두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 내에는 사회혁신담당관 외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증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등을 두어 유기적인 업무 협업 하에 시민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 공유경제 도시 부산

- 부산은 지난 2014년 3월에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주무부서로 일자리경제본부의 경제기획과에 업무 분장함
- 그러다 보니 부산은 기존의 기업지원, 외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보완적 개념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유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창조적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 문제 해결 등 도시발전의 새로운 발판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음

〈표 5〉 부산시의 공유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BigBook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 만들기 사업	부산
똑똑, PLACE	이웃과 함께 학습하는 평생교육 사업	"
이코에코	소비자들이 잉여회원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판매 및 구매를 돕는 기업	"
여가나눔 '산책'	걷기를 통한 만남, 만남을 통한 공유를 실천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기업	"
아워카셰어링	각 구 지정 주차장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어플로 예약, 운행, 반납까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차량공유 사업	"
스타트업 3D 프린팅 지원센터	3D 프린팅 전문 교육 및 3D 프린팅 스타트업 지원 사업	"
부산사람도서관	부산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서비스 사업	"
나눔한복	옷장에 잠자고 있는 한복 공유 서비스 사업	"

- 부산시는 현재 공유경제정보센터(<http://www.sharebusan.kr>)란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음

3) 광주광역시의 공유문화도시

-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 촉진 정책 수행을 위한 주무부서로 참여혁신단에 관련 업무를 분장함
 - 참여혁신단에서는 공유문화도시 추진 관련 사업과 공유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공유자원 발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운영, 정부 3.0 업무 추진, 시민소통 활성화 시책 추진,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및 운영,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정책기획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표 6〉 광주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지정대상	공유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유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무소가 반드시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출처 : 광주광역시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고문

〈표 7〉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지원 한도
지정공모 (1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광주’ 웹사이트 및 SNS 운영 등을 통한 온라인 공유의 장 운영 - 공유 소식, 공유자원공유단체공유기업 발굴, 업데이트 등 - ‘공유광주’ 웹사이트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유 활동을 하는 단체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온오프라인)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유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 - 공유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 ‘공유문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 공유활동 추진 	2천5백만원
자유공모 (5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도시 광주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마케팅 등) 	6천만원(사업당 1천만원 내외)
사업비사용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바수선바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 운영비 ◦ 보조사업자의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출처 : 광주광역시 2016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고문

- 광주시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을 매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공유포털 사이트(<http://www.sharej.kr>)를 통해 공유자원의 링크와 공유정보 제공, 공유단체 및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음

4) 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을 매년 공고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가 공정경제과이다 보니, 산업 및 경제 영역에서의 공유사업 추진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경기도는 공유경제의 영역을 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물류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음
 - 공공물류유통센터는 물류센터 부족과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위해 대기업(CJ대한통운)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내 일부 토지, 건물 등 인프라를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이를 다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공유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첫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 외 경기도는 더 많은 도민에게 차량 공유 실천을 위해 ‘행복카셰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음

- 공유와 소통의 가치를 두고 출발한 경기도 ‘행복카셰어’ 는 지난 2016년 5월 5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차량 185대에 탑승인원 770명을 태우며 공유의 가치를 실현해옴
- 경기도의 ‘행복카셰어’ 서비스가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들과 다른 점은 경기도 공용차량 중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도민들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 이를 위해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관광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함

<표 8> 경기도 공유경제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	5천만원(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제1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내 단체, 대학, 유관단체 등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쉽 회원 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특정1개 시군 대상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도·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지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 유휴공간 등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 - 그 외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활동 등 ※ 사업별 2천만원 내외 지원 가능(심의시 조정 가능)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 2016년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 공고문

5) 그 외 지자체

- 그 외 41개의 시군구에서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공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유 관련 사업 및 업무분장을 살펴보더라도, 기획관련 부서에서부터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주민자치과, 사회적 경제과,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등 공유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

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9〉 전국 시·군·구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현황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비고	
서울 (19)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경정과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기획팀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자치안전과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자치행정과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마을공동체과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정책담당관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	사회적마을과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자치행정과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정책기획담당관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마을공동체과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사회적경제과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자치행정과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경제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기획팀	
부산 (8)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진흥과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진흥과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총무과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생활지원과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진흥과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진흥과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진흥과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창조경제과
광주 (5)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촉진 조례	주민자치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지역경제순환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촉진 조례	행정지원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주민자치과
경기도 (4)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	주민자치과
	구리시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	산업경제과
	성남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자리창출과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수원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팀
시흥시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주민자치과	
	시흥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전라북도 (2)	전주시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사회적경제지원과
	완주군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	기획감사실
전라남도 (1)	여수시	여수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지역경제과
경상남도 (2)	양산시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경제기업과
	거창군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기획감사실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시행규칙	·

구분	조례 및 시행규칙	비고
----	-----------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4. 주요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공유경제의 확산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크게 기존 법 및 제도적인 틀을 깨지 않고서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기존의 전통시장과 대립 및 충돌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또한, 공유경제가 지나치게 경제적 가치 추구의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고, 관 주도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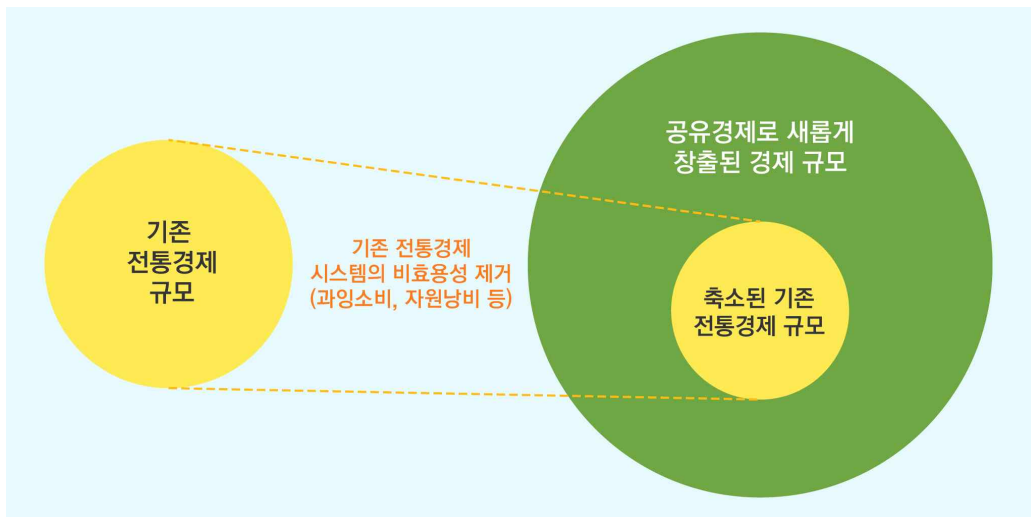
1) 현행 법제도와와의 상충문제

- 먼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 재편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공유경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통경제의 틀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부당경쟁 내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공유경제의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공유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중개거래에 의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우, 자칫 사회적 범죄, 안전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과세 부과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음
 - 우버의 경우, 미국 보스톤 및 인도에서의 성폭행 사건 등 5건의 강간, 170여건의 성폭행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었고, 미국의 미시건 주에서는 우버 기사가 영업중 총기를 난사하여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버 기사 신원조회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함(이종인, 2016)
- 공유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 조직화된 활동 및 구성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로 공유기업 및 단체가 필요한 이유임
- 공유기업 및 단체를 중심으로 공유 플랫폼이 구축 및 보급되고, 이를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행정이 주도하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많은 관주도의 공유 플랫폼 기반 서비스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이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음
- 단지 연계만 시켜주는 기능으로는 한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추가적 서비스가 가미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간 기업이 더 잘 하는 영역임

- 예를 들어 유희공간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랏(IDLeLOT)의 경우, 단지 공간중개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및 정부에 대해서는 행사대관, 워크숍간담회, 제품 설명회 등의 서비스를 대행해 주거나,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오피스 쉐어,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한편, 판매자 및 창작자에 대해서는 공간 단기임대 및 편집샵과 로드샵 등의 공간 컨설팅 서비스 등 이용자 맞춤형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한 사례의 예임
- 즉, 행정의 역할은 정보통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여사업들과 소비자들의 수요가 연결될 수 있도록 ICT 중심의 정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기업들이 그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써 공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공유기업 및 단체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한편, 공유문화가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중요함
- 다시 말해, 공공의 역할이 데이터 개방 및 법·제도적인 정비와 지원 강화에 있다면, 민간의 역할은 공유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용자 맞춤형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 전통시장과의 대립 및 충돌 문제

- 둘째,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수록 전통경제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에 많은 사회적 비용 및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음



[그림 6] 공유경제에 의한 경제시스템 재편

- 이러한 우려와 달리,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과잉소비, 자원낭비 등)이 제거되면서 그 자체의 비중은 비록 줄어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유경제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다시 말해, 전통경제와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적 관계구도 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공유경제가 발전 및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3) 지나친 경제적 가치추구 관점에 대한 비판

- 셋째,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촉진 및 공유활성화 시책을 살펴보면, 공유경제를 경제적 가치 추구 관점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다음의 표를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경제관련 부서에서 공유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이며, 서울시 및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기획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음

〈표 10〉 공유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주무부서

구분	도시재생부서	기획부서	경제부서	주민자치 등 행정부서	계
광역시도	1 (대전1)	3 (서울2, 광주1)	3 (부산1, 경기도2)	0	7
시군구	0	13 (서울 강동·강북·관악·광진·금천·동대문구·서대문·양천·영등포·송로구, 부산 사하구,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남도 거창군)	15 (서울 성북·은평구, 부산 남·북·영도·중·해운대구·기장군,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성남·수원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양산시)	14 (서울 구로·노원·도봉·동작·마포·성동·용산·은평구, 부산 서구, 광주 광산·동·북·서구, 경기도 시흥시)	42
계	1	16	18	14	49

주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의 공유 관련 조례 운영 현황 재구성

- 비록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크게 기획관련 부서와 경제관련 부서, 주민자치 등의 행정관련 부서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회복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활성화 사업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유경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공유경제 구현을 통해 각 지자체가 근본적으로 추

- 구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 및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될 것임. 공유경제를 단지 경제 활성화 정책의 대안적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면, 전통경제와의 충돌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음
 - 단기적으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기존 산업구조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 및 환경적 가치에 더 주목하여 공유사업을 전개해 나감이 바람직함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도시공동체의 복원, 공공과 민간의 신뢰관계 형성, 협력적 소비를 통한 자원 활용력의 증대, 집단지성에 의한 사회관계망의 회복 및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문제에 대한 자생적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도시정책 수단으로서 공유경제를 활용해야 함

4) 관 주도에서 시민 및 민간영역 중심의 사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전통경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공유경제 사업영역을 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존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상호 보완적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한 매개·촉진 수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형의 공유 서비스 모델 발굴과 사업을 확대 적용 및 지원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소셜 벤처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및 단체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공유기반의 사회혁신투자기금 조성 등)하거나, 공유기반의 리빙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제3장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법적 근거 및 기본 정책 방향

제3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사례

제4절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3장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대전시의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첫 논의는 지난 2012년 9월에 착수하여 2014년 1월에 수립 완료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변경)」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의 기본 이념으로 공유개념을 적극 도입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과학문화 공유도시, 대전”으로 비전을 설정하면서 부터임
 -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변경)」의 주요 3대 목표 중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감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과제로 제시하며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대전시는 이미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한 대안 화폐경제 일환의 한발렛츠, 민관협력 방식의 복지만두레 등 공유경제의 원형에 가까운 사회적 경제활동이 오랫동안 태동해 왔던 도시였음
- 그러나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활동이 도시 전 영역에 걸쳐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내지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은 서울시 및 부산시 등의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음
- 공유경제에 대한 기반환경 조성 및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6기를 맞이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함
- 지난 2014년 6월 민선 6기 공약과 대전시민경청위원회에서 공유관련 사업을 주요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면서 그해 8월 말에 「함께 쓰는 공유네트워크 조성」 워킹그룹 TF팀이 구성됨
- 이후 3개월 간의 TF회의를 거쳐 「대전 공유네트워크 추진전략과 시책」이란 공유네트워크 워킹그룹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2월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됨

2. 추진목적

-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개념은 지난 2014년에 발간된 공유네트워크 워킹보고서에서 추진 목적과 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잉여 자본(토지, 물건, 정보 등의 유형의 자산)과 사회적 자본(규범, 가치, 지식, 재능 등 경험에 기반한 무형의 자산)을 서로 공유, 교환, 임대, 대여하는 협력 공동체로서의 사회관계망”

- 위 공유네트워크의 정의를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 소비와 소유방식을 분리한 공유경제의 지향성을 넘어 공동체 경제, 시민 경제로 나아가는 연결고리 역할까지 그 개념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적 가치는 참여와 협력, 신뢰와 소통, 그리고 나눔과 자립이라는 기본 이념이 시민 중심의 도시공동체 속으로 선순환 되고 일상적 생활 공간속에서 구체화 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수단이자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집단지성의 발현체제로 이해함이 타당함(정경석 외, 2014)

제2절 법적 근거 및 기본 정책 방향

1. 지원조례의 법적 지위 및 위상

- 현재 공유경제와 관련한 단일 형태의 통합 국가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만, 각 개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를 기존 법령에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선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그 좋은 예로써, 현재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이용하여 연간 18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업으로 ‘공유민박업’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 규정을 적용하여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쓰는 자동차대여사업(카셰어링)을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세종시를 선정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카셰어링 시범도시 활성화 사업(어울링카)’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모 법령이 없기에 각 지자체는 공유 촉진 내지 공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대전시 또한 지난 2015년 2월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공유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음
- 공유활성화 조례에서는 5년 단위의 공유활성화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공유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공유활성화지원센터, 그리고 공유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 공유활성화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고, 지난 2016년 2월에 도시재생본부 주관 하에 대전시 공유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선정하였음

2. 유사법령과의 관계

- 공유경제의 기본토대는 신뢰관계망의 형성에 있는 만큼, 대전시는 지난 민선 5기부터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음
- 이를 토대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 최근까지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공유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자격요건으로써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복지만들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음
- 또한, 공유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으로써 소셜미디어 및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유활성화를 위한 주체 양성과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대전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대전광역시 재능기부활성화 조례」 등과 관련이 있음
- 끝으로,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능 영역 및 범위로써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

례」,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대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등과 관련이 있음

- 대전시 공유활성화의 주 목적이 도시 및 사회 문제 해결¹²⁾을 위한 집단지성의 발현 체계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사업 가능 영역은 이 외에도 좀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리라 봄

3. 기본적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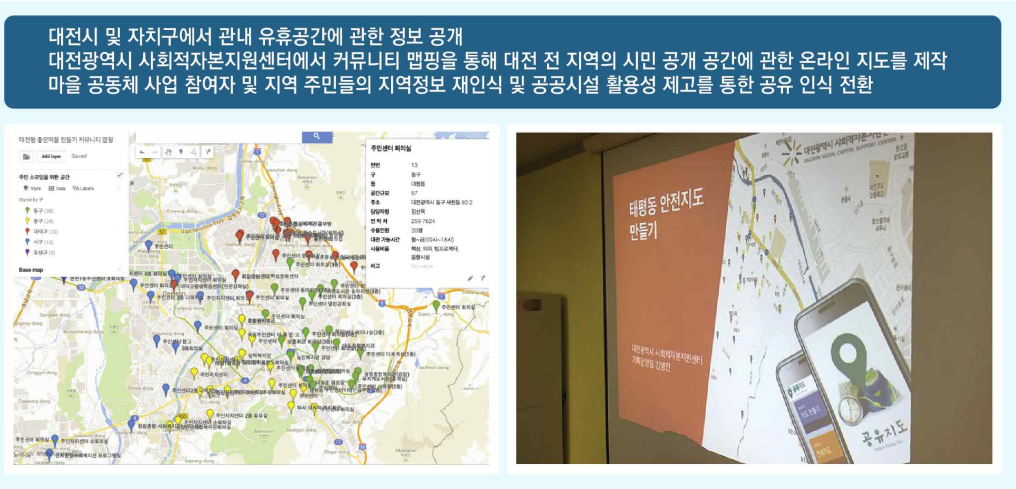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공유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동 조례 제2조 ‘공유’의 정의에서도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6조에서는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지정의 자격요건으로써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을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공유기업 또는 공유네트워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보면, 대전시가 추구하는 공유활성화의 기본방향은 협력적 공동체로서의 사회관계망 회복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의 기업화 활동 지원에 주된 목적을 두기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망의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창출과 지역문제에 대한 자생적 대응능력을 갖춰나가도록 지원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음

12)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사회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이웃과의 단절 등 복지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쓰레기 문제 등 환경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그 밖에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3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 현황

1. 2015년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공유경제 시작학교’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전 시민 공유공간 지도’ 제작과 시민들의 지식과 재능공유를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시범사업으로 ‘건너유 리빙랩’을 추진한바 있음



[그림 7] 대전형 커뮤니티 맵핑 사례(대전 시민 공유공간 지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유성구 갑천 징검다리의 실시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지식공유를 통해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
호우시 스마트폰을 통해 징검다리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전에 우회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인명사고를 방지



[그림 8] 건너유 리빙랩 지식 공유 협업 사례

- 그러나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기는 민선 6기 들어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라는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임
- 그동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왔던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중 일부를 분리하여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음
-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개방된 유휴공간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시민들이 자발적인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온라인 공유플랫폼 구축사업’,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모사업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네트워크 아카데미 사업’,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유네트워크 기획사업’ 이 진행되었음¹³⁾



[그림 9] 공유네트워크 플랫폼 ‘대전쉐어’

13) 공유네트워크 기획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일상에서 공유를 경험하고 즐기는 공유파티와 글로벌 지식공유 컨퍼런스인 TEDx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식공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음

〈표 11〉 2015년도 공유네트워크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대전광역시 공유네트워크 조성사업 전체	335,000
-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	30,000
- 공유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7,000
-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	240,000
- 공유네트워크 기획사업	58,000

○ 지난 2015년에 추진된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은 총 21개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에서 발간한 FGI보고서를 토대로 시민수요가 높은 공유공간 중심으로 자유공모를 제안하였고, 대전시에서는 대표사업으로 ‘공구도서관’, ‘공유서가’, ‘육아용품 공유사업’ 을 제안하여 지난해 4월과 6월 2차에 걸쳐 총 2억 3천만원을 지원함(천영환, 2015)

〈표 12〉 2015년 공유네트워크 선정공동체 및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연번	모임명	사업명	사업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1	(주)피플카쉐어링	나눔 피플카	10,000
2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	대전미디어쉐어링	8,500
3	예술공동체 '나마스테'	도시예술공유공동체	10,000
4	짜투리나무 그리고	짜투리나무 그리고	5,000
5	월간 토마토	주민공유공간 '딴데'	10,000
6	The BENCH	엄마의 레시피	6,490
7	엄청나다	공유주방	16,850
8	CSL 코칭스쿨	청소년교육공유공간	4,000
9	비욘드캠퍼스	커뮤니티 공유공간 플랫폼	12,400
10	공감만세 인터내셔널	공유 여행정거장	14,000
11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마루	육아용품 공유	9,853
12	원도심레츠	두루두루 함께하는 공간	13,400
13	스터디팩토리	대학생 문화 나눔 공간	9,500
14	비비박스	대전 청년 쉼어하우스	20,000
15	위즈온협동조합	장애인 문제 공유 사업	9,000
16	나우영화치료연구소	상생 시네마클럽	13,870
17	LE LIVRES	체크아웃 북스	14,680
18	상상협동조합	모나리자 프로젝트	8,750
19	프로젝트 유	출판물 공유사업	15,000
20	가치일자	지식커뮤니티 공유공간	15,000
21	도시여행자	여행도서관	7,700

○ 이 중 주목할 만한 공유네트워크 사업으로 공유공간 ‘별집(Birlzip)’ 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청년 및 1인 창업자들이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시너지를 만들어 월 200여명이 왕래하고 있음



[그림 10] 공유공간 ‘별집(Birlzip)’



[그림 11] 자동차 공유 ‘피플카’

- 또한 대전의 대표 자동차 공유기업인 ‘피플카’는 50대의 자동차를 시간대로 나누어 서로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월 2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2. 2016년 공유네트워크 사업 현황

- 금년에는 ~~~ 중심으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됨
- 먼저 금년 초에 공유네트워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전시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6곳을 선정하였음
- 또한 공유네트워크 지역거점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건강한 주민조직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유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지원 사업이며, 이는 마을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도 주요 중점 공유네트워크 사업으로는 공유친화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친화 시범마을을 조성사업은 다수 공동체가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 및 활동하여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 등의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임
- 종교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은 종전 114개소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넘어

종교단체와의 MOU체결을 통해 공유시설을 341개소로 확대한 사업임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새집줄게 헌집다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시 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공유하면 건축 설계비를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제4절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 내지, 도시재생(도시경제기반형, 근리재생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적인 학습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대응노력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임
- 또한, 지역자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있음
-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 역시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진단하는 단계부터, 상호 교류하는 학습의 단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역량 강화 단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 단계 등 각 단계별로 무엇을 공유하고 누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 나갈으로써 공유의 가치를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 단지 공유네트워크를 비즈니스의 한 모델로 경제적 가치 교환 수단으로써만 이해¹⁴⁾할 것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이라는 공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내재화한 상태에서 자원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공유네트워크 사업 추진시 반문해 보아야 할 주요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향후 공간 권역별로 맞춤형의 공유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가능토록 장소기반형의 공유 지원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즉 대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발굴 및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생 거점 시설 내지 자원을 활용한 공유플랫폼의 구축,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경험과 교육기회 확대,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마을과 마을간의 거래로 공유 유통체계를 확산 및 다변화 시켜 나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14) 경제적 가치 교환 수단으로만 이해한다면, 자칫 공유에 대한 사유화 문제 내지, 기존시장과의 충돌로 인한 우버(Uber)와 같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 우버의 경우 기존사업자 및 택지법인 등 이익 집단과의 충돌과 더불어 공유 활동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표 13〉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자원 등을 활용한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예시

세부과제	주요내용
주거나눔 서비스 사업	◦ 주거공간 여유가 있는 노후세대(독거노인 포함)와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 및 1인 가구 등을 연계시켜주는 주거공간 나눔 서비스
생활복지 공유사업	◦ 주머니텃밭, 상자텃밭가꾸기,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주민공동 관리(꼬마정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	◦ 스마트 앱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 및 주차정보 제공 -공공기관, 공동주택 주차장, 교회 주차장 등 유휴시간대별 주차장 사용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전일제 사용자와 대기시간 공유협약체결(주민 간 이용시간, 분담금액 등 자율적 합의)
키즈공유서비스 사업	◦ 의류, 장난감, 인형, 아동서적, 보육관련 소품(유모차, 보행기 등) 등을 무료로 빌려 쓰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공유매장을 생활권 단위로 설치 운영 -공유포인트제와 연동해서 대체화폐로 활용
동네공방 공유사업	◦ 우산, 자전거, 시계 등의 수리서비스 제공 ◦ DIY(Do It Yourself) 교실 운영 -공구 대여서비스, 집수리 서비스 등 병행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을 통한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등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사회적자본형 도시농업 육성 사업	◦ 교외지역의 농지나 택지개발지역의 빈터, 공지, 텃밭 등 안쓰는 토지를 신탁 받아 농산물 등을 직접 경작해서 자급자족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 전개 ◦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확대 유도 ◦ 하늘농장 조성 : 아파트 주민 공동체 텃밭 조성 및 도농교류 ◦ 옥상텃밭 가꾸기 : 농촌체험형 옥상텃밭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상자텃밭 : 소형 텃밭상자 보급 ◦ 입체형 도시농장 모듈 개발 및 보급 확대 ◦ 공동경작을 통한 개인주의 및 단절의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승화 -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시농부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카셰어링/키플 공유사업	◦ 자동차를 빌려 쓰거나, 출퇴근 방향이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자동차를 공유해서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 정부3.0 사업과 연계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공유서비스 사업	◦ 정부 3.0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개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자 및 지역내 ICT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전용망, 호스트 서버, 백본 장비, 운영관리 솔루션 등의 장비 및 솔루션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대전클라우드공유센터를 개원운영 -과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빌려 쓰는 기업문화로 전환 ◦ 공공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솔루션 및 컨설팅 제공 등
스마트 워크 센터 보급 확대 사업	◦ 창조경제전진기지의 전초적 역할을 수행할 움직이는 업무공간으로서 스마트 워크 센터를 도시 전역에 설치 운영 ◦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

세부과제	주요내용
태양에너지 공유발전소 사업	<p>용을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형 사무공간을 제공</p> <p>◦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공간 내지 유휴 공지와 태양광발전설비를 각각 임대하여 도심 속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는 사업 전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규모 100kw이하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는 대신, 100kw 이상은 현 의무할당제도(RPS)를 따르도록 하는 제도 보완 및 개선이 시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주택, 상업용 건물, 시청, 학교, 도서관 건물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 뿐 아니라, LiDar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건물의 연간 일조량을 조사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태양광 전기발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지도화 하여 대시민을 대상으로 정 정보를 공개 및 공유 하는 Solar Map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p>

- 둘째, 공유네트워크 개념이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에게는 낯선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기존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전통적이고 획일화된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네트워크가 비로소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임
-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의 동기가 자발적 나눔과 수혜적 가치로만 국한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대안적 수단으로도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간의 공유 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함
- 핀테크(FinTech)와 공동체 화폐(Community Currency)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통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협력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대전시는 지역화폐 운동조직인 「한발렛츠」를 통해 지역화폐인 ‘두루’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화폐 유통체계가 ICT와의 접목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 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¹⁵⁾
- 셋째, 공공자원 및 자산에 대한 우선적 공개와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15)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공간내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았을 때 체감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수요자 이용 관점의 공유네트워크 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연스런 구두효과를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타당함. 즉,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도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이 사례를 통한 인식 확산이 필요

필요가 있음

- 결국 공유네트워크가 지속성을 띠면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민간 또는 주민 중심의 활동주체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행정이 지원토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최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¹⁶⁾과 IoT 실증단지 조성 등의 시범공모사업¹⁷⁾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공공빅데이터와 정부 3.0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공유네트워크 사업의 확대 전략마련이 필요함
- 일례로 공공의 필지를 리퍼포징(re-purposing)¹⁸⁾해 지역사회 및 경제적 자생을 시민 스스로 이끌어 내도록 지원하는 웹 플랫폼을 개발하여 시민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시의 사례처럼¹⁹⁾, 공유지나 시유지 등 유휴부지 내지 빈집, 빈점포 등 유휴공간 자원에 대한 이용(임대)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공개해 줄 수 있는 유휴공간 활용지원 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사회문제해결형의 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문제 해결형의 공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적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소셜 벤처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²⁰⁾을 지원하거나, 리빙랩(Living Lab)²¹⁾ 방식의 사업추진을 적극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대부분이 융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적 감성이 보다 중시되는 창조적 지식기반사회 및 디지털소사이어티

16)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환경, 건강, 교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발굴해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을 융합해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미래부에서 2015년 주요과학기술 R&D사업의 일환으로 총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

17) 「K-ICT 전략」의 일환으로 IoT부문에서의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2개 분야에서의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과 7개 전략업종별 실증사업(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을 추진 중에 있음

18) 사이버 공간에서 얻은 기존의 정보를 단순히 재조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이나 목적에 맞게 정렬 및 가공하여 기존과는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함

19) <https://www.newschallenge.org/open/open-government/submission/possible-city/>

20)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하는 기업들은 영리 기업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의 주요한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직들간의 연대와 사회적 결속이 강한 편임. 따라서 중간조직이나 연구조합을 통해 개발된 지식·정보경험을 확산시키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음

21) 리빙랩은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선정해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니즈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용자 참여형의 랩을 의미함. 도시, 학교, 아파트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사용자,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P)의 혁신모델로서 사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랩으로 활용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게 됨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구현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볼 수 있음

- 단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도시공동체의 복원, 공공과 민간의 신뢰관계 형성, 기존 자산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낭비 최소화, 그리고 집단지성에 의한 사회관계망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에 대한 자생적 대응 능력을 갖춰나가는 일이 대전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공유의 진정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

제4장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
제1절 공유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환경 조성

제2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제3절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

제4장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제1절 공유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환경 조성

1. 법·제도적 개선 및 정비방안

1)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음
- 1기 공유서울 추진계획에서는 공유도시의 비전 및 추진방향, 공유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였고, 총 20개의 우선추진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난 2015년 4월에 수립된 2기 추진계획에서는 1기 추진계획에서의 추진성과 및 한계 등 평가하고,

2) 공유활성화 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공동체사업 내지 사회문제 해결형의 혁신사업으로 지원할 것인지, 대안적 경제모델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 공유활성화 사업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원칙 및 특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공유자원에 대한 적정 규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능 유무,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공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단

- 교통, 문화,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 활동과 충돌되는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내지 별도의 「공유네트워크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2. 민관협력 및 조직 역량 강화 방안

1) 민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 규정

- 대전시는 공유활성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대민 홍보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할 것과 행·재정적 지원자로서의 비전 제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지역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에 의한 상향식 방식의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규제완화책 등을 선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이 공유플랫폼 구축과 사업화 전략에 적시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해줄 필요가 있음
- 민간영역에서는 보다 잘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최소의 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2) 중간지원조직간의 협업 네트워크 강화

3.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제2절 공유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1. 「더불어 모두다 공유!」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공유단체, 공유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공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공유사업의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과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 등을 개최토록 함
- 한편, 예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홍보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는 장을 마련함
 - WTA의 하이테크페어, 대전 아티언스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와의 연계 및 공조를

통해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리라 봄

- 공유네트워크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체험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

2. 「찾아가는 배달 공유마당」 운영

- 공유네트워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공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 시민체험 및 참여 확대를 일상적 공간 내에서의 공유문화 생활화 유도

3. 공유공간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공유시책 개발

- 공유공간과 관련해서는 크게 공간 공유와 자원 및 시설의 공유로 구분이 가능함
- 도시공간은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으로 구성되지만 가치지향적인 공유 개념의 고찰을 통해 도시공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공유공간을 매개로 한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
- 대전시의 경우도 거점공간공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다양한 공유공간 시책 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유공간의 대표 사업 사례로써 공유주택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공유주택(Shared Housing)은 공간사용에 있어서 개인침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부엌이나 식당, 거실 같은 공동공간은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함(Dobkin, L, 1983)
- 공유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는 경제적, 실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첫째, 경제적 측면의 경우 기존 주거에서 사적인 영역 공간으로 사용했던 공간과 시설들을 거주자들이 서로 공유하여 생활함으로써 개개인의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남
 - 둘째, 실제적인 측면의 경우 거주자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같은 일을 하는 기회와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셋째, 사회적인 측면의 경우 다른 개인이나 가구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형성할 수 있음

일본의 셰어하우스 사례

- 일본 셰어하우스는 공유, 소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유공간의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본적으로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공통점을 가지지만 유형에 따라 공간구성에 차이가 있음
- 통상적으로 개인의 기초적인 생활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여가활동 공간 및 작업공간이 추가됨

유형	특징
컬렉티브하우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지내는 셰어하우스 유형, 욕아실을 비롯한 공동 식당, 욕실, 부엌이 구성됨
그룹하우스	독신 및 독거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구성
코퍼레이티브하우스	입주 희망자들의 건설조합에 의한 거주자 직접 참여하는 셰어형 하우스
밍글하우스	반 공동생활의 주거 스타일,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둠

4. 공유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조성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자본 운용 한계 등으로 초기 정착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으로 소셜펀딩(Social Funding), 소셜벤처링(Social Venturing), 커뮤니티 펀딩(Community Funding) 등으로 불리고 있음
- 주로 기부, 후원,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크라우드 소싱에 기반을 둬)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특징임
- 최근에는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매체를 통해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보다 쉬운 참여를 유도해 내면서도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공개적인 펀딩이므로 펀딩 과정이 공개되고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과정을 가짐으로써 신뢰관계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은 부동산 개발사업, 벤처기업 및 아이디어 지원 등 경제적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공공가치를 위한 참여(기부, 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크라우드펀딩 유형	프로젝트의 주요목적	주요 플랫폼
순수민간 주도형	지역공간 개선, 소외계층 지원	영국 Spacehive, 미국 Neighbor.ly
정부-민간 자금매칭형	규모가 큰 공공사업 추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 지원	후원형 플랫폼 (정부와 협약)
정부-민간 공동기획형	지역경제 활성화	후원형 플랫폼
정부 공공사업 자금조달형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미국 Citizinvestor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따라서 금융 관련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리라 보며, 정부 및 지자체 예산만 바라볼 것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일반시민이나 소액투자자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을 지원하는 금융공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함
- 이 때 기금 등의 전문적 운영은 지역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되, 대전시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공증 또는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해 줌이 타당하리라 봄
- 크라우드 펀딩의 초기 정착 및 성공여부는 지역기반의 스타공유기업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임

류준열 스타숲 가로숲길 ²²⁾

- 2016년 말,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 앞 효원로 200m 구간에 배우 류준열(30) 씨의 이름을 딴 '류준열 스타숲 가로숲길'이 조성될 예정임
- 수원시와 민간단체가 '시민참여형 숲 조성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류씨의 팬클럽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한 600여만 원으로 조성됨
- 수원시는 시민 참여형 숲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트리플래닛은 부지에 숲을 꾸미게 됨
- 트리플래닛은 스타숲, 추모숲, 기념숲 등 다양한 주제의 숲을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업임
-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공간 조성에 참여하고,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공유도시의 좋은 사례임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

- 킥스타터는 대중을 통해 발명자들이 내어 놓은 기발한 아이디어, 영화, IT기기, 게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자들은 후에 그에 대한 보답품을 받게됨
- 킥스타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는 텀블벅과 굿펀딩, 인큐젝터가 있으며,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을 후원하는 소셜펀치와 개미스폰서도 있음²³⁾

영국 브리스톨시의 식용작물정원 프로젝트

- 영국 Bristol시는 도시 개선을 위한 '식용작물정원 조성' 시민프로젝트로 102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4,184파운드 모금에 성공함
- 도시 중심부에 3개의 식용작물정원을 조성하고 후원자로 참여한 시민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공간 개조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지역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신뢰와 공공서비스의 결합을 이룬 사례임

영국의 Spacehive

- 2011년 영국의 건축 및 설계 전문 기자 출신인 Chris Gourlay가 시민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임
- Spacehive는 공공 공간 사업에 대한 맞춤형 프로젝트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은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과 보조금 및 기타 자금을 결합하여 자금조달을 최대화 할 수 있음
- 낡은 건물 보수, 공원 조성, 놀이터 개조 등 주로 도시환경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는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TCM같은 협력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함
- 2015년 11월 말까지 총 420만 파운드를 모금하였고, 프로젝트 당 평균 모집액은 2만 9천 파운드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평균 성공률은 44% 수준, 68개 마을이 프로젝트 유치에 성공함

22)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277&aid=0003853712&sid1=001&rc=N>

23) http://joyfulunion.or.kr/new/xe/story_05/12134

영국 런던의 작은 공원 조성 프로젝트

- 영국 런던의 ‘작은 공원 조성(Pocket Parks Programme)’ 프로젝트로 200만 파운드를 조달하여 26개 지자체에서 100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함
- 시민 혹은 단체가 런던의 버려진 공간들을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바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런던시가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1만 파운드 이하 프로젝트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체 예산의 20%를 조달하고 런던시가 80%를 보조, 1~2만 파운드 프로젝트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런던시가 각각 50%를 부담함
- 공공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정부-민간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이며, 정부는 민간 자금 활용으로 공공서비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음²⁴⁾

경기도 트로스트(온라인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 경기도 UP창조오디션에서 수상한 대학생 스타트업 ‘트로스트’는 대화형 온라인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개발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함
- 111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1,031만원(목표액 500만원) 모금에 성공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목표액을 매칭자금으로 지원 받음
-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정부 지원 스타트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임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감귤특집 프로젝트

- 제주 감귤 수확기에 다른 지역 청년들이 제주도 농촌의 일손을 돕고 제주 여행경비를 마련하는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감귤 특집’ 프로그램을 제주관광공사, 지역협동조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공동으로 기획되어 45명 참여로 860만원 모금에 성공한 사례임
-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참가자가 후원이나 기부가 아닌 참가비(숙박비, 차량지원비, 일부 식소비)를 내고 참여한 프로그램임
- 지역 내에서 생산(청년근로)과 소비(관광)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우수 사례임

미국의 Citizeninvestor

- Citizeninvestor는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모집을 위해 만들어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Davis Islands의 주민들이 수영장 수리를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마을 이벤트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Citizeninvestor의 모델이 됨
- Citizeninvestor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지방정부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포기된 공공사업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함
- Citizeninvestor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보상이 없는 기부형으로 이루어지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해줌
- 사업은 보통 지방정부 기관에서 제안하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Citizeninvestor 홈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총 24개임

24)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0>

참고문헌

- 곽노환(2013),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야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 3, p.148
- 김이홍(2016), 시민과 정책 그리고 도시 - 공유(Shared)의 도시, Urban Design Focus(2016-10),
- 심기우,김진(2016), 영국의 공유형모기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 Vol.14 No.3(통권 제33호) 2016. 09
- 장수정 외 2인(2016),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공유공간 사례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제18권 1호 2016. 05
- 최윤,김성아(2015), 도시 정보 공유 및 가시화 환경을 통한 시민인식 변화 및 참여 체계 조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1 No.04 2015. 04

인터넷사이트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0>

-http://joyfulunion.or.kr/new/xe/story_05/12134

-<http://m.news.naver.com/likeRankingRead.nhn?oid=277&aid=0003853712&sid1=001&rc=N>